

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: 영·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

조종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
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
jhcho@kiep.go.kr

박영준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
경제학과 조교수
yjpark@ajou.ac.kr

이형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
일본팀 전문연구위원
hklee@kiep.go.kr

양다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
국제금융팀 연구원
dyyang@kiep.go.kr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1) 연구의 배경

- 2차대전 이후 일본을 필두로 대만, 한국, 중국 등의 동아시아 경제는 소득 증대와 빈곤 감소의 측면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성공적인 실적을 거둬.
- 이 호조의 경제실적이 동아시아 지역 특유의 경제발전 전략에 힘입은 것인지 아니면 서구의 전략과 차별화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음.
- 특히 1997~98년 동아시아 지역에 닥친 외환위기로 이 지역의 발전전략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도 지적됨.
- 그러나 동아시아 위기의 원활한 극복과 2007~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경제가 보여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는 이 지역의 발전 모델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을 제기함.
- 한편 자유화·민영화·정부역할 축소를 골자로 한 영미식 발전 전략의 경우 그 모델을 적용한 중남미, 아프리카 등의 경제실적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함. 또한 2007~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 모델의 취약점이 다시 드러남.
-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의 발전 모델과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전파한 영미식 모델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향후 세계 각국, 특히 동아시아와 우리나라가 고유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집필됨.

2) 연구목적

- 지난 반세기 동안의 동아시아 경제실적을 영미를 비롯한 다른 지역과 비교

- 동아시아 모델의 몇 가지 핵심적 요소들을 영미모델과 비교 평가
- 동아시아 모델의 국별 유사점과 차이점 분석
-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동아시아와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제시

2. 주요 연구결과

1)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 추이와 전망

-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, 기적의 형성(1960~97년)
 - 산업화·근대화의 후발주자였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전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루어왔음.
 - 1960년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은 영·미는 물론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1인당 GDP가 낮은 수준이었음.
 - 동아시아는 성장속도 면에서 서구국가들의 산업화·근대화 시기와 비교할 때 월등히 빨랐을 뿐만 아니라 지속성 면에서 중남미,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 신흥국에 비해 뛰어난 성과를 나타냄.
 - World Bank(1993)에 따르면, 1980년대 이전 많은 신흥국들이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중 극히 일부만이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 일부에 속함.
 - ‘동아시아의 기적’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경제성장 경험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으며, 성장의 배후 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.
 - 선행연구에서는 동아시아 고도성장의 배경으로 유교문화권의 높은 교육열과 저축률을 바탕으로 한 인적·물적 자본의 축적, 수출과 제조업 중시, 적

극적인 외국자본 유치, 그리고 정부주도 경제개발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.

■ 외환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수정(1998~2007년)

-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기 시작함.

- 고도성장의 배경이었던 투자와 외국자본 유입이 과열되었고, 이에 따라 자산가격 급등, 기업의 비효율적 투자확대 및 중복 과잉투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.
- 이러한 상황에서 1996년 태국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자, 국제 투자자들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축소 및 급격한 자금회수에 돌입하면서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함.
- 외환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는 IMF 등 서구 학계의 비판 또는 자기반성으로 영·미식 경제모델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며 성장을 지속함.
- IMF는 한국 등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면서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대해 비판하며 영·미식 경제모델을 도입할 것을 요구함.
- 이에 따라 한국 등은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자유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하였으며, 개방과 흑독한 구조조정을 거쳐 자유화·세계화를 표방하는 영·미식 경제모델을 일부 수용하며 발전모델을 수정함.

■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의 상대적 고성장(2008년 이후)
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성장으로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됨.

- 동아시아는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및 실물 부문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V자형으로 빠르게 회복함.

- 동아시아 지역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월등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0년대 들어 동아시아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수용했던 영·미식 경제모델

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함.

- 특히 위기의 원인이 영·미식 모델에서 중요시했던 금융자유화의 한계에 있었다는 점이 동아시아의 향후 성장경로 모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음.

■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빠른 경제회복은 주요 교역상대국으로서 중국의 부상과 통화가치 저평가에 따른 수출회복에 기인함.

- 그러나 각국의 통화가치는 이미 상승하여 수출증가에 기여할 수준을 벗어났으며, 인위적 환율 조정도 바람직하지 않음.
- 동아시아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의 성장세 유지가 향후 동아시아의 성장 지속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나, 중국경제는 고부가가치 산업 지향, 내수위주 경제구조 전환과 더불어 환율, 금리 결정 메커니즘 개혁 등 장기적 과제들이 남아 있음.

- ADB(2011)는 2050년에 아시아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의 두 배 수준인 52%를 기록,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함.

- 이 같은 전망이 시사하듯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의 판도에 변화가 온 것은 사실이나 향후 동아시아의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안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장기적 도전과제를 해결해야 함.

2) 동아시아 모델의 평가: 영미 모델과의 비교

■ 시장 중시와 일정한 정부개입

- 이른바 ‘워싱턴 컨센서스(Washington Consensus)’에 담긴 영·미식 경제발전 전략의 특징은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자유화, 민영화, 정부역할 축소를 강조함으로써 규제받지 않은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임.

-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출범한 1980년대 초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할 때까지 약 30년 동안 영·미식 모델은 주류 경제학계의 중심적인 이론적·정책적 토대로 자리잡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함.

- 그러나 2007~08년의 서브 프라임발 금융위기로 미국과 영국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음.
 - 이와 같은 실물경제의 대침체를 야기한 금융위기의 가장 큰 요인으로 금융 산업에 대한 지나치게 허술한 규제·감독이 지적됨.
 - 미비한 규제와 과잉 유동성에 따른 자산 버블, 그리고 그에 바탕을 둔 소비 증대로 지탱되던 실물경제가 자산 버블 붕괴와 함께 급전직함.
- 서브 프라임발 금융위기는 특히 금융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경시할 경우 최악의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줌.
 - 특히 부동산 대출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부개입(감독, 규제)이 반드시 필요함을 입증함.
- 이와 같은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는 영·미에서 지난 30년 동안에 비해 경제운용에서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지적 흐름이 예상됨.
 -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업무영역을 어느 정도 구분한 2010년의 Dodd-Frank법 입법 등은 그와 같은 지적 동향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된 예로 볼 수 있음.
- 한편 동아시아 모델에서는 비록 나라에 따라 적용 방식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수출과 제조업을 중시하는 적극적 산업정책과 높은 저축·투자율 등의 공통분모가 발견됨.
- 특히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중요시되어 금융을 정부의 영향력하에 두고 정부가 유망하다고 지목한 산업과 기업에 금융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의 경제운용이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찰됨.
 - 육성대상 산업과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수출가능성에 두고, 제조업 발전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모델은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자리잡음.
- 그러나 1997~98년의 동아시아 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모델에 내재된 과도한 정부개입 등 일부 비시장적 요소들이 위기 요인으로 비판받게 됨.
 - 특히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동아시아에도 영·미식 시장경제의 핵

심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주문함.

- 상당수 동아시아국들은 세계적인 여론 주도층과 IMF 등의 위와 같은 주장과 동아시아 모델의 적용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에 대한 자체인식에 따라 아시아 위기 극복과정에서 영·미식 체제를 어느 정도 수용하였음.
 - 자본·무역거래의 자유화, 변동환율제의 채택, 은행 민영화 등으로 경제운용에 있어 정부의 역할 축소와 시장기능의 중시를 지향함.
- 비록 시점은 달리하지만 1997~98년의 동아시아 위기와 2007~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와 영·미에서 진행된 서로 상반된 사고의 전환은 전통적인 영·미식 모델과 동아시아 모델 어느 한 쪽도 모든 나라가 모든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모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시사함.
 -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과제는 동아시아가 강조해 온 정부 역할과 영·미 모델이 강조하는 시장기능의 균형 잡힌 조화를 지향해야 함.

■ 서비스업(금융업) 중시와 제조업 중시

- 2008년 현재 GDP 가운데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미국과 영국이 각각 77%로 일본(71%), 한국(61%), 중국(42%) 등 동아시아국들뿐 아니라 독일(69%)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임.
- 특히 금융업의 팽창이 괄목할 만하여 금융자산 규모의 대GDP 비율이 1980년에서 2007년 사이에 120%에서 440%로 상승함.
 - 그 배경으로는 과감한 규제완화, 장기간의 팽창적 통화정책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, 제조업 종사 대기업들의 금융업 비중 증대 등이 작용함.
- 그러나 2007~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미국, 영국, 아일랜드, 아이슬란드 등의 경험을 보면 금융산업에 대한 의존이 과도할 경우 활발하고 안정적인 경제실적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.
 - 거대 은행들은 경영하기에 지나치게 복잡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이 되며, 위기발생 후에도 퇴출이나 구조조정이 어려움.

- 금융기관의 지나친 양적 확대 추구로 신용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대출이 진행됨.
- 리스크 헤지의 본 취지를 지닌 파생상품이 단기·고수익 실현을 위한 투기적 상품으로 변질되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함.
- 한편 동아시아는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 및 자본재의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수출진흥에 치중하면서 비교역재의 성격이 강한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을 더 중요시함.
 - 2008년 현재 일본, 한국, 중국의 GDP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%, 28%, 33%로 미국과 영국의 13%, 12%를 크게 상회함.
- 양질의 고용과 무역수지의 균형을 위해서는 핵심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가 필수적임.
- 동아시아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은 성장·고용·국제수지 등 모든 측면의 경제성과를 용이하게 하는 큰 장점임.
 - 앞으로도 동태적 비교우위를 전망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·발전시켜 제조업의 위상을 유지·제고할 필요가 있음.
- 그러나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파생되는 금융·법률·회계 등의 서비스 수요 증대와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아시아의 서비스산업 의존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
- 따라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.
 - 금융의 경우 금융선진국들의 제도와 금융상품 등으로부터 배울 점은 배우되, 철저한 금융감독을 통해 건전성에 바탕을 둔 금융기관 경영과 금융업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.

■ 내수 중시와 수출 중시

- 영·미식 모델에서는 충분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기술발명과 기초산업의 육성에 따른 경제 효율성 증대를 통해 성장을 달성함.
-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과도한 차입과 과도한 소비에 의존한 경

제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음이 입증됨.

- 자산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기대한 무분별한 차입에 의존한 성장이 자산버블 붕괴 시 금융시장의 혼란과 실물부문의 대침체로 귀결될 수 있음이 입증됨.
- 한편 동아시아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이 괄목할 만한 경제성과를 이룬 것은 분명하지만 그 부산물로 상대가격의 왜곡이나 일부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 유지 등의 부작용도 발생함.
-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있는 만큼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직 취약한 내수 진작을 통해서 수출·내수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.

■ 자본축적과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

-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의 저축률은 크게 하락하였음.
 - 1960~90년 중 미국의 개인 저축률은 9% 정도였으나 1990년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를 경험하면서 소비성향이 급증함으로써 저축률이 하락함.
 - 2006년 현재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은 -1.0%로 대공황시기인 1933년의 -1.5%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.
- 저축률 하락에 따라 투자도 부진하여 영·미의 GDP 대비 투자율은 지난 30년 동안 20% 내외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율을 크게 하회함.
 - 물적 자본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부진하여 미국과 영국의 교육수준에도 문제점이 관찰됨.
- 한편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축률은 30~50% 수준으로 미국, 영국의 15~20%를 크게 상회함.
 - 풍부한 저축은 정부의 전략적인 개입을 통해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에 집중 투자되어 산업 발전을 이끔.
 - 그 과정에서 정부개입에 따르는 어느 정도의 자원배분 왜곡은 감수함.

-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저금리기조의 유지, 과도한 가계대출, 인구 고령화 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축률 하락이 우려되므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적정 저축률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.

3) 동아시아 모델의 국별 유사점과 차이점

■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국별 유사점

- 첫째, 동아시아 경제발전과정에서는 공통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책조합을 통한 정부개입이 있었음.
 - 일본, 대만, 한국은 성공적인 산업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광범위한 산업정책을 실시하였으며, 일본은 통상산업성, 한국은 경제기획원, 대만은 경제건설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함.
- 둘째, 경제부흥과 자립, 선진국 추격 등을 위해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했으며, 이를 위해 제조업을 중시하였음.
 -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경제부흥과 자립을 위해 1940년대 후반 정부주도의 경사생산방식을 통해 석탄·철강 등의 기간산업을 육성하였으며, 한국 역시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통해 제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.
- 셋째, 부존자원의 부족, 국내시장의 협소, 외화부족 등의 한계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 수출 중시의 공업화를 시행하였음.
 - 1950년대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일본에 이어 대만과 한국은 1960년대 초 세계무역 확장기에 수출지향정책으로 선회함.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아시아 선발국을 모방해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을 유지함.
- 넷째, 일본·대만·한국·중국은 고도성장기에 30~40%대의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한 높은 투자율을 통해 급속한 자본형성을 달성하였음.

■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국별 차이점

- 일본·한국·대만·중국의 성장과정에서 이들 국가의 발전을 견인한 요인이 유사점이라면, 차이점은 이들 국가의 향후 발전 지속성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.
- 첫째, 한국은 대기업,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채택하였음.
 - 1970년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전략과 대만의 지속적인 중소기업 우선정책은 양국간 기업조직과 경제력 집중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왔음.
- 둘째, 일본·한국은 높은 투자율을, 대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율을 보였음.
 - 일본·한국은 고도성장기에 30~40% 수준의 높은 투자율이 유지되었던 반면 대만의 투자율은 25% 전후 수준이었는데, 이는 외채보다 국내저축에 의존하는 국가전략과 위험한 대형투자를 기피하는 중소기업형 투자에 기인함.
 - 중국의 경우 2002년 이후 투자율이 40%를 초과하고 있는데, 최근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과잉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지속여부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.
- 셋째, 일본·대만·한국은 발전전략 측면에서 산업구조를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한 반면, 중국은 개혁·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오히려 중공업의 비중을 낮추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발전시켰음.
 - 중국은 1949~78년의 계획경제 기간에 실행가능한 최대한의 투자를 중공업에 쏟아붓는 사회주의적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을 추구하였으나, 개혁·개방에 따라 계획경제하에서 과도하게 비대해졌던 중화학공업의 발전이 억제되고 대신 경공업이 발전함.¹⁾
- 넷째, 대만은 금융규율의 확립에 적극적이었고, 한국은 관치금융의 영향으로 금융규율의 확립이 미흡했음.
 -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전면 부상하는 가운데 대만은 UN 및 IMF와 IBRD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제금융기관에서 구제금융을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고,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자 노력하고

1)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1990년대 후반 이후 재차 중공업 중심으로 제조업이 재편됨.

금융기관 위험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음.

- 다섯째, 일본·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(FDI)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, 중국은 FDI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에 견실하게 활용하였음.
 - 일본과 한국은 고도성장의 초기 단계에는 외국인투자자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FDI의 유입을 매우 꺼렸고 대만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보였음.
 - 그러나 개혁·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과 대외경쟁력 강화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입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큼.
- 이러한 차이점은 각국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균형,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확립 등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침.

3. 정책 제언

1) 동아시아

■ 수출과 내수의 균형 발전

- 최근 선진국 경제부진의 배경에는 과도한 부채를 통한 부동산 등 자산증식, 급속하게 진행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, 불균형적인 소비 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한 저축과 투자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음.
- 또한 미국 등의 과다소비와 재정적자는 대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하고, 중국 등 동아시아국들의 과다저축은 이들 국가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야기함으로써 이른바 글로벌 불균형의 요인으로 작용함.
-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미국 등 적자국의 소비 축소와 저축 증대, 재정적자 감소, 중국 등 동아시아국의 내수부양 등 정책적 대응이 요망됨.

- 동아시아의 경우 수출호조의 성과가 내수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통해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.
 - 내수확대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함.

■ **적정 저축률의 유지**

- 동아시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높은 저축률의 유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.
 - 2009년 현재 총저축률은 일본 20%대 초반, 한국과 대만은 30% 전후, 중국은 50% 이상을 유지함.
- 문제는 일본과 한국에서 가계 저축률이 격감하고 있는 점임.
 - 일본의 경우 가계저축률이 1991년 15.0%에서 2003년 7.7%, 2010년 3.2%로 격감하였는데, 이는 고령화와 저금리 기조 등에 기인함.
 -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사상최고치인 24.7%에서 1998년 21.6%, 2010년 3.2%로 급락했는데, 이는 가계소득의 증가세 둔화, 국민연금 등 사회 부담금의 증가, 교육·통신·교육비 등의 소비행태의 하방 경직성 등에 기인함.
-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할 경우 가계 저축률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.
- 가계저축 증대를 지향하는 정책대응의 내용으로는
 - 창업활동 촉진과 신성장동력 산업 및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
 - 이 과정에서 기업투자 유도를 통한 경제활성화
 -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지출 수요와 최근 분출되는 사회복지 수요의 확대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 등을 들 수 있음.

■ **동아시아의 경제협력 강화**

- 실물부문에서 역내 경제협력이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줌.
 - ASEAN+3 차원의 지역금융안전망 설립과 한·중, 한·일 간 통화스왑협

정 규모 확대 등이 그 예임.

- 동아시아의 고도성장 가능성과 역내 무역·자본거래의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동아시아 경제의 미래가 역내 경제협력에 의해 크게 영향받을 수 있음.
- 따라서 과거사 문제나 영토분쟁 등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정기적인 민·관 합동연구에 따른 경제적 장애요인 분석 및 해결을 통해 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.

2) 우리나라

■ 자본 유출입 규제에 대한 의견

- 외국 자본의 대규모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·검토되는 규제 조치가 자본 유출입의 동기를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는 있음.
- 그러나 주식·채권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.
- 따라서 일부 합리적인 제도적 규제를 검토·시행하되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는 외국자본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정부, 금융기관, 기업 등의 경제주체들이 우선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음.
 -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경제의 강건한 펀더멘털과 금융자산의 수익성 및 안정성을 유지해서 유입된 자본의 급속한 유출을 방지해야 함.

■ 외환시장 개입 최소화

- 수출과 경상수지의 지나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을 미세 조정하는 어느 정도의 환시 개입은 필요할 수 있음.
- 그러나 이 역시 꼭 필요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하며, 특히 대외 무역의존도가 GDP의 100%를 상회하는 우리 경제 상황에서 외환시장 개입정책은 성

장·물가·국제수지 등 모든 경제지표들의 종합적인 검토에 바탕을 두고
실행되어야 할 것임.

- 수출·국제수지에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원화의 완만한 절상을 용인하는 것이 바람직함.

■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한 의견

- 우리은행의 경우는 현재의 은행산업 상황으로 보아 외국자본보다는 국내자본에 매각되는 것이 바람직함.

- 현대 7대 시중은행 가운데 세 은행(시티, 제일, 외환)은 외국인에 의해 소유·경영 중이며, 또 세 은행(국민, 신한, 하나)은 외국인 지분이 50% 이상임.
- 은행업의 대외개방에 따른 생산성 제고나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는 충분히 달성하고 있음.
- 따라서 우리은행은 국내 민간자본에 의해 소유·경영되도록 해서 토종은행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은행산업에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.

- 한편 산업은행의 경우는 반드시 민영화되어야 하는지, 타 은행과의 합병을 통한 메가뱅크화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음.

- 대규모 국책은행으로 남아서 민간은행들이 하기 어려운 장기적 안목의 대출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.
-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초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퇴출과 구조조정의 어려움 등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므로 메가뱅크안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함.

■ 금융감독의 개선

- 최근 거래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에 주목해야 함.

- 2011년 장내·장외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3경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어, 우리나라 GDP의 30배에 육박하며, 장내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량은 세계 1위임.
- 파생상품은 리스크 헤징이라는 고유의 선기능도 가지고 있지만, 단기 고수익을 위해 지나치게 투기적인 상품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임.
- 이러한 추세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요인이었고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급팽창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, 파생상품의 투기적 성향을 제한하는 적절한 규제·감독 시스템의 준비가 필요함.